

☉ 의·약대 내년 정원 동결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가진 의료인력 정원 조정 협의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 사정을 감안, 내년도 의과대, 약대의 신설 또는 증원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정원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고 8월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대불대, 동의대, 목포대 등 3개 대학이 올해 제출한 의과대학 신설 계획과 2개 대학의 약학과 신설 또는 증원 계획을 반려했다. 입학 정원이 동결됨에 따라 전국 41개의 과대학의 2002학년도 신입생 입학 정원은 BK21 사업 계획에 의해 자동적으로 정원이 축소되는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올해와 같은 3,253명 수준에서 억제된다. 24개 대학의 약학·제약학과 관련 정원도 1,340명으로 동결된다. 그러나 이번 정원 조정에서는 지난해 의약분업 파동 이후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설득을 위해 제시했던 '의과대학 정원 10% 감축'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

☉ 기초과학연구센터 10개

설치

과학기술부는 기초과학 전공자를 BT(바이오기술) 분야의 핵심인력으로 흡수하고 이들이 연구 활동을 하면서 군복무를 대체

할 수 있도록 오는 2003년까지 기초과학연구센터(MRC) 10개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MRC의 인력은 기초과학자와 임상과학자, 생명과학자, BT 산업체 연구원 등으로 구성하고 비용과 인력은 국가가 3년마다 실적을 평가해 최장 9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특히 ▲핵심 기초과학 기술의 중장기 연구 ▲고급인력 양성 ▲기초과학과 생명공학, 임상과학간의 교류와 기술적 협력 ▲기초과학 분야의 고가 시설 및 장비의 운영, 관리 등을 각각 맡게 된다. 과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내년 1~2월에 시행 계획 공고와 신청을 받고 3~6월에 평가 및 선정 절차를 거쳐 같은 해 7월부터 설치에 나서기로 했으며, 경과를 지켜본 뒤 오는 2005년에 20개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 4년제 대학에도

게임-애니메이션학과 허용

정부는 '한류(韓流)'에서 나타난 우리 문화기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에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영상 등 '콘텐츠 특성화학과'를 늘리고, 문화콘텐츠 전문대학원도 연차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는 8월 17일 문화

산업 육성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8월 26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주로 전문대 위주로 설치돼 있는 게임·애니메이션학과들이 4년제 대학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이외에 관련 학과목 신설 및 시설·장비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또 영화아카데미, 방송영상아카데미, 게임종합지원센터 등 비정규과정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려 연간 배출 인원을 현재의 400명 수준에서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규 직장을 갖지 못한 게임 및 영화 프리랜서를 연간 1,000명씩 재교육하고, '문화콘텐츠 전문 프로듀서' 및 '전문 마케터' 등을 매년 100명씩 양성하기로 했다.

☉ 사이버대 내년 정원

1만6,800명 증원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2일 사이버대학 정원 조정 및 신규 설립 계획을 접수한 결과 올해 개교한 9개 사이버대학이 현재 39개 학부 6,220명인 정원을 59개 학부 1만 2,900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 신규인가를 받은 7개 사이버대학 가운데는 동국사이버대를 제외한 6개 대학이 내년부터 모두 3,900명을 뽑을 계획이다. 내년에

새로 개교하는 사이버대학(괄호 안은 운영 주체)은 학사학위 과정이 대구사이버대(대구대), 사이버게임대(원광대), 한양사이버대(한양대), 동서사이버대(동서대), 아시아사이버대(교육기업 스칼라피아) 등 5곳이고, 전문학사 학위과정은 영진사이버대(영진대) 1곳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이버대학의 내실화를 위해 정원 조정 기준을 신설, 전임교원 대 총입학 정원 비율이 1대 2백 이내, 겸임교원과 시간강사를 포함한 강좌 운영교원 대 총입학정원 비율이 1대 40이내여야 증원을 허용할 계획인데 대부분 대학이 이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지역에 교육대 설립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경기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내년 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폐석산 부지 9만 3,000평에 연건평 1만 400여 평 규모의 교육대를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수도권에 4년제 대학을 신설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일단 이 교육대는 인천 교대의 분교(경기캠퍼스)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 정원은 500명, 전체 학생 수는 2,0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내에

는 현재 835개 초등학교에서 2만 6,515명의 교사가 88만 9,000명의 학생을 맡고 있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33.5명, 학급당 학생 수가 40.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편이다. 경기지역은 올해 929명의 초등학교 교사가 부족한 상태이며 내년에도 초등학교 교사 1,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시모집 합격자

내년 2월에 등록금 납부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5일 입학 60일전까지는 대학이 등록금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는 현행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번 2학기 수시모집 합격생은 등록금 입학동의서만 대학 측에 제출하고 실제 등록금은 내년 2월에 내도록 하는 방침을 확정, 각 대학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는 합격생이 등록금의 10%를 예치금 형식으로 대학에 내면 입학동의서를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해 내년 2월에 나머지 90%를 내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입학동의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서명 날인 난을 포함한 1장짜리 간단한 양식으로 대학들은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상반기 수시 1학

기 모집에 합격해 이미 등록금을 낸 수험생도 희망할 경우 대학에 환불을 요청해 입학동의서를 내고 내년 2월에 등록금을 낼 수 있게 했다. 물론 이 경우도 10%의 예치금을 내면 입학동의서 없이 내년 2월에 나머지 90%만 내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합격하면 곧바로 등록금을 받아 온 대학 입학관리 관행에 맞춰 지난 수시 1학기에는 등록금 징수를 허용하고 관련 법규를 개정해 등록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하려 했으나 '입학 전까지는 학생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등록금 납입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내년 교대·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정원 증원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10일 전국 11개 교대, 41개 사범계 대학의 2002학년도 정원을 올해보다 478명 늘어난 2만 3,890명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유아교육과의 경우 전문대는 전면 동결되는 반면, 교육 여건을 갖춘 8개 4년제 지방대의 정원이 190명 늘어나고 이화여대는 1명이 줄어들어, 총 189명이 증원된다. 이 가운데 ▲유아교육과 신설대학이 강릉대(20명), 부경대(20명), 가야대(20명) ▲일반학과 정원을

줄어 유아교육과를 신설한 대학이 대불대(20명), 대신대(20명) ▲일반학과를 유아교육과로 전환하는 대학이 동국대(30명), 영남대(30명) 신라대(30명)이다. 교대는 부족한 초등학교 교원 양성을 위해 6개 대학 120명을 늘리기로 했다. 교대별로는 부산교대와 광주교대가 각 30명, 춘천교대와 전주교대가 각 20명, 청주교대와 제주교대가 각 10명씩 늘어난다. 반면 교사가 남아도는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는 대부분 정원이 동결되며, 5개 대학은 사대 정원이 96명 줄어든다. 특수학교 교원 양성 정원은 여수대, 중부대, 천안대 등 13개 지방대에 한해 일부 증원 또는 신설해 모두 265명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대학원 신설을 신청한 5개 대학 가운데 경산대(25명), 광주여대(40명) 등 2개 대학의 교육대학원 신설을 허용했다.

☉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안'

확정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위원장 허갑범 연세대 교수)는 9월 6일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안을 확정,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

입되는 2003학년도 입학생(현 고2)부터 대학에서 의학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의학교육입문시험(MEET), 임상교육입문시험, 임상교육종합평가시험 등 3단계 시험을 통과해야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기초학문 분야에서 학술학위 과정(M.D.-Ph.D. 등)을 이수한 사람이 연구소 등에 5년 이상 근무하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의학 교육 체제는 기존의 2(예과)+4(본과)에서 2(학부과정 85학점 이상 이수)·3(조기졸업자)·4(학사학위)+4(전문대학원)로 다양화된 다.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전공과 상관없이 어떤 학과·학부에서라도 최소한 2년 이상 이수하고, 85학점 이상을 취득한 뒤 MEET에 응시해야 한다. 전문대학원(4년제) 과정 중 2년차에는 임상교육입문시험, 4년차에는 임상교육종합평가시험을 실시하며 이를 통과해야 졸업이 인정된다.

☉ 정부 인턴사원

1만명 추가 채용

노동부는 9월 18일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선발하는 정부지원 인턴사원을 1만명 추가 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턴사원 선발 대상에는 내년 2월 대학 졸

업 예정자도 포함된다. 정부지원 인턴제는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기업체에 3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씩 지원금을 주고 이들을 정규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다시 3개월간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소년 실업률이 7.8%로 전체 실업률의 2.3배에 이르고 특히 경기 상황이 불투명해 기업의 신규 채용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돼 인턴사원을 추가로 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채용을 원하는 기업과 구직자는 9월 19일부터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지방대 육성특별법 마련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7개 권역 21개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지방대 육성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국가 예산의 1%를 지방대에 할당해 줄 것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방대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대학 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해 정부의 세출 예산(2001년 94조원)의 1%를 지방대에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대학 육성 지원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비수도권대학 육성과 관련한 중

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대통령 소속의 '비수도권대학육성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밖에 국회, 법원, 행정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 연구위원 위촉 때 30% 이상은 지방대 교수들이 맡도록 하고,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 전체 대학 졸업생 중 지방대 출신이 졸업생에 비해해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6월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에게 제출한 '2000년도 학교 종류별 취업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대졸자의 취업률은 56.0%로 18만 6,273명의 취업 대상자 중 10만 4,371명만이 일자리를 얻었다. 일반 대졸자의 취업률은 '96년 63.3%, '97년 61.8%였으나 '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사태 발생과 함께 '98년 50.5%, '99년 51.3%로 급락했다가 지난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다.

● 사이버대 재학생도

입영연기 혜택

올해 처음 문을 연 사이버대학의 재학생들에게도 내년부터는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입영연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9월 3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예고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이버대학 재학생에게도 입영연기 혜택을 달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며 "병역자원의 수급을 고려해 해당자의 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기초의학 전공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허용하고, 의과대학 대학원생의 입영연기 연령을 28세까지로 연장하며, 해병 병종에 군약병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복무 중 국외 이주 사유로 복무가 단축된 사람이 1년 6개월 이상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32세까지 재복무토록 한 것을 35세까지 재복무하도록 하고 국외여행 귀국보증인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 국립대 내년 등록금 금년도 수준 억제

교육인적자원부가 7월 20일 발표한 '교육여건개선 계획'에서 2002년부터 3년간 국립대 등록금을 연간 20%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후에는 완전 자율화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여건개선계획'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10월 12일 "최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나빠진 경기상황과 물가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내년부터 국립대 등록금을 20%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2003년 이후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립대 등록금을 20% 인상하려는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으며, 내년 국립대 등록금 인상률도 올해(5%)와 비슷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립대들은 '97년 5.0%, '98년 0.8%, '99년 1.3%, 2000년 6.7%, 2001년 5.0% 등으로 등록금 인상률이 5년 연속 한 자릿수로 억제돼 국립대 등록금과 차이가 커졌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차질을 빚어 왔다고 주장해 왔다.

● 국립대 1개교 한의학과 개설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10월 7일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신규인력 수급과 한의학의 국제적 관심을 고려해 국립대 1개교에 정원 40명의 한의학과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해 와 설치 대상 학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국립대에 한의학과 설치 신청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낸 뒤 9월 25일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설치를 신청한 대학은 강릉대, 강원대, 경상대,

공주대, 부경대, 목포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등 9개 대학이다. 한의학과 설치는 '93년 사립인 동신대와 세명대에 설치된 이후 8년간 동결됐으며, 최근 3년간은 아예 정원 증원 및 신설 신청을 받지 않았다. 국립대 한 곳에 한의학과가 설치되면 한의학과 입학 정원은 경산대, 경원대, 경희대, 대전대, 동국대, 동신대, 동의대, 상지대, 세명대, 우석대, 원광대 등 11개 대학 750명에서 12개 대학 790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한의과대 재학생은 3,800여 명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학교를 지정할 방침이다. 의료인력 수급정책은 복지부가, 양성기관 설립인가는 교육부가 맡고 있다.

● '우수 인재 대통령상'

2002년 도입

교육인적자원부는 10월 4일 전국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창의성·지도성·봉사성이 뛰어난 고교생(현재 3학년) 72명과 대학생(현재 4학년) 1백명을 내년 2월 선정, 우수 인재 대통령상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상 대상 고교생은 서울·경기 각 8명, 나머지 14개 시·도별로 각 4명이다. 수상 고교생에게는

대통령 메달과 장학금 3백만원, 산업 시찰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또 깊은 영향을 준 스승과 함께 대통령이 주처하는 리셉션에 초청된다. 다만 수상이 매년 2월 결정되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특전을 받지 않는다. 수상 대학생에게는 장학금이 주어지지 않으며 메달과 산업 시찰 기회가 부여된다. 이 제도는 미국이 1964년부터 매년 봄 미국수능시험(SAT 등) 성적 우수 고교생 141명과 이들을 지도한 교사를 백악관으로 불러 메달을 주고 격려하는 대통령 장학생 프로그램을 본 뜬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장학생에는 해마다 한국계 학생들이 선정돼 화제가 돼 왔다. 우리나라 대통령상 선발 기준은 일단 성적 우수·창의성·지도성·봉사성 등이 된다. 아울러 고교생의 경우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특정분야 재능 우수자 등도 포함된다. 대학생의 경우 졸업 평점이 상위 5% 이내인 학생뿐만 아니라 장애인·고학생·벤처 창업자·재학 중 국제 수준의 논문 발표자 등도 해당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12월까지 시·도 교육청과 대학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은 뒤 학계·정부·시민단체 대표 및 기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최종 수상자를 선정

할 계획이다.

● 지방대 육성에 500억 원 지원

교육인적자원부 서남수 대학지원국장은 10월 12일 부산 동명산업정보대(총장 정순영)에서 열린 '지방대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대 지구 노력 지원 및 구조조정, 특성화,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에 500억 원을 지원하는 지방대 육성사업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또 "신입사원 채용시 지방대생에게 원서조차 배포하지 않는 등 차별적인 관행을 시정하도록 기업들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협조 요청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지방대 육성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석 경북대 총장)는 국가예산의 1%와 국가고시 합격자 정원의 절반을 지방대에 할당해 줄 것을 요청했고, 비슷한 내용의 지방대육성특별법이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나 법제화 가능성은 희박하다.

● 국립대 교수 1,000명 증원

교육인적자원부는 10월 15일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와 협의한 끝에 대학 교육의 질 개선과 국

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국 28개 국립대(일반대 24개, 산업대 8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00명의 교수를 증원하기로 교수 정원 증원 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인 100명은 외국인 교수로 뽑는다. 현재 국립대의 외국인 전임 교수는 43명에 불과하다. 이와는 별도로 외국인 비전임 교수 33명도 충원한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 300억 원도 편성했다. 새로 충원되는 1,000명은 현재 국립대 전임 교수 1만 2,283명(산업대 1,249명 포함)의 8%에 이른다. 국립대 교수 증원은 '99년 100명, 2000년 63명이었으며, 지난해에는 동결됐다. 교육부 조홍래 행정관리담당관은 "관련 부처와 이미 합의를 마쳤다"면서 "대학별로 곧 증원 수를 통보해 채용 공고를 통해 연말이나 내년부터 모집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4만 4,000여 명에 이르는 전국 4년제 대학의 시간 강사들이 전임 교수로 채용될 기회가 커졌다. 1,000명이 증원되면 국립대의 법정 교수 확보율은 62.17%에서 67.23%로 5% 포인트 오른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도 재학생을 기준으로 30.08명에서 27.81명으로 낮아진다.

☾ 지방대생 300명에 장학금 800만원씩 지원

내년에 지방대생 300여 명에게 연간 800만원씩의 장학금이 국비로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월 21일 학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의 우수 학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내년에 지방대생 312명을 선발해 연간 80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지방대 육성 예산 500억 원에 이런 내용의 장학금 지원 대책을 포함한 지방대 우수 학생 유치 지원 예산 46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장학금이 지원되는 지방대는 산업대를 포함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4년제 대학 104개 전체로 학교당 3명씩 총 312명에게 연간 800만원씩이 학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된다. 지급 대상은 주로 지방고교 출신이면서 지방대에 진학한 신입생 위주로 선정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내년 이후에도 매년 장학금 지원 규모를 확대, 우수 지방 고교생의 지방대 진학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0년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위 5% 학생 가운데 서울지역 대학 입학자가 62.5%로 우수 학생의 서울 및 수도권 편중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 내년 대학 IT 관련학과 지원 금액 올해보다 20% 증액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10월 25일 2002년 정원을 확대하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대한 장비구입비와 대학 IT관련 학과의 교과과정을 산업체 수요에 맞도록 개편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대학이나 대학원의 IT관련 학과의 경우 올해 500억 원이 책정됐으나 내년에는 이보다 약 20%가량 늘어난 6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2002년에 정원을 확대하는 대학원의 경우 2년간 약 15억 원, 대학은 1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SW학과나 학부를 설립하는 경우 15억 원, 대학원을 설립하는 경우는 20억 원 가량의 지원을 계획 중이다. IT학과의 교과과정을 산업체 수요에 맞게 개편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는 연 1억 5천만원의 지원을 계획 중이며, 비IT학과에 IT접목 교과목을 개설하는 대학에는 연간 1억 원 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